

[종합·해설]

盧대통령 '조직개편안' 제동 향후 전망

이명박 정부 장관없이 출범 불가피

신당 반대로 설 연휴 이전 국회 통과 희박

신·구 권력 정면 충돌…李당선인 대책 강구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본격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새 정부 출범 전 조작개편이 불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조작개편에 관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하더라도 서명 공포하는 일은 새 대통령에게 넘기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조각

작업이 상당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3부2처'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각료 인선이 끝났다 하더라도 조각 명단을 발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수위와 한나라당 안팎에서 자칫 장관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 있다.

물론 현법 53조에 따라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

하지 않고 서명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할 경우 정부조직법은 15일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률로서 자동 확정된다.

또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하도록 돼 있다.

즉, 노 대통령의 뜻과 관계없이 정부조직법은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자동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시점, 대통령 취임식인 2월 25일부터 예산안 20일 이전인 내달 5일까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취임식 당일이라도 각료 명단을 발표할 수 있지만 더 늦어질 경우 장관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현재로선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통일부 폐지 등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달 6일이

전에 관련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측근은 이날 "조직개편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각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새 정부 출범 전 각료명단을 발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측은 현재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일부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부처에 대한 장관 임명을 유보한 채 부분조각을 단행하는 카드로 신당과 협상에 나서 정부조직법을 조기화 통과시키는 방안과 함께 새 정

부 직제에 맞게 각료를 미리 내정해놓고 취임 직후 발표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측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추후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 상황을 봐가며 대응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정부조직 개편안 등 차기정부를 위한 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28일 올해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 노대통령, 부처 통폐합 반대 왜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안이 담고 있는 개별 부처의 통·폐합 내용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인수위안이 기초로 삼고 있는 대(大)부처주의에 대해서는 "장관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다할 수 없다"며 결국 한 부처에 업무별로 여러 담당장관이 생겨나고, 오히려 정부 직까지 늘어나게 돼 '작은 정부'로 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다른 부처로 통·폐합되는 부처 중 통일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와 신설 기획재정부로 흡수되는 예산기능에 대해 중점 거론했다.

노 대통령이 인수위안에 반론을 제기한 통폐합 부처들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전략이 담긴 조직"들로서 향후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가늠할 중요 장애가 될 전망이다.

◇예산기능의 경제부처 독립 필요성=노 대통령은 예산기능을 담당하는 예산처가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로 흡수되는데 우려를 표했다. 예산기능이 경제부처로 통합되면 예산구조가 변화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축소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경제부처는 경제에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부처는 시민적 권리를 대변한다. 그런데 부처간 협의를 해보면 언제나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사회부처의 목소리보다 커다. 좌파정부라는 소리를 듣

“경제부처 통합땐 사회적 약자 예산 축소”

통일부·균형발전위 등 참여정부 철학 담겨”

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학기술혁신체계 유지 필요성=이번 개편으로 과학분야와 기술분야가 분리된 채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로 흡수통합되는 과학기술부의 운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과학기술부가 생기고 나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분석해봤느냐"고 반문하며 "지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들어 본적이 있느냐"고 인수위에 물었다.

◇여성부 존속 필요=노 대통령은 "보육과 가정교육의 중요성, 가족의 가치를 살펴보자고 여성부의 업무로 해놓았던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의 확대 개편 이유를 설명하며 "여성부에서는 귀한 자식 대접 받은 업무가 복지부로 가면 여러 자식 중 하나, 심하면서 자녀 취급을 받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통일부·외교부의 분리 필요성=노 대통령은 "통일부는 북한을 잘 알고, 외교부는 국제관계와 미국을 잘 안다. 지난 5년 내내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핵 문제나 남북협력, 북한 인권 등의 여러

문제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이를 조정했다"며 "두 부처가 합쳐지면 부처내에서 장관이 이를 조정하게 될 것이고,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과연 이런 사안이 부처내의 조정업무, 장관급의 조정업무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정통부 존속 강조=산자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기능이 분산 흡수되는 정보통신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통부가 없었더라면 우리 정보통신기술이 세계 일류가 되었겠느냐. 앞으로 정통부가 없어져도 우리의 정보통신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국기균형발전위 폐지 반대=노 대통령은 "균발위는 여러 지역,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을 심의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업은 어느 특정부처의 사업이 아니고 모든 부처에 걸리는 일인데 균형위를 없애고 나면 어느 부처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나. 균형발전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설날 선물-안동 간고등어

전국택배 054)859-0571
054)859-0715

한국인터넷주문센터 www.godungn.co.kr
한국인터넷주문센터 054)859-0571
한국인터넷주문센터 054)859-0715

전국 이마트에서도 선물로 찾습니다.

임시국회 첫날부터 조직개편 공방

한나라, 원안대로 처리 촉구

신당, 통일·해수부 폐지 반대

국민을 위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신당에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당 초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오늘 처리되기를 바랐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뒤 "국회 행자위가 25일에야 처음 열렸고 신당은 내일 공청회를 한다고 한다. (신당의 태도는) 고의 지연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거북이 걸음'"이라고 비판했다.

신당 손학규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들이 스스로 밀려 시대정신을 포기하면 우리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적극 협조하지만 단호하게 견제하는 애당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가치가 없다. ('총선')표가 달아나지 않을까'를 보기 전에 국가의 미래, 국민의 이익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인수위는 한 점 한 점 손대지 말고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지만 원안을 고집하면 그는 또 '국민이 선택한 새 정부에 대해서 (신당이) 판죽을 걸고 발목을 잡는 데 대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새 정부 출범은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고 이를 도와주는 것 이 기본 정치윤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당 손낙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의 차기 정부가 할 일에 대해 시비를 걸며 이토록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생떼를 쓰는 꼴"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에 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적극하고 걱정하는 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면서 "국회에서 지혜를 모으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말해 인식차를 보였다.

민노당 손낙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의 문제제기는 내용상 제기할 만한 것"이라며 "대(大)부처주의의 반대, 기획재정부 독립, 통일부 여성부 폐지 반대, 국가인권위나 청렴위원회의 독립 등을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가 이제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시작한 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국회에 맡겨둘 일이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